

도 수산물 더 안전해진다

전주 수산물품질관리원 개원... 검역 검사·원산지 표시 등 업무 수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지원장 이인수)은 26일 전주시 소재 한국교직원공제회 전북회관에서 개원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지원은 지난 6월 20일 해양수산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수산물의 수입 검역, 수출 검사, 국내수산물 안전성 조사,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품질인증제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원식에는 서장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조병서 전북도의회 부의장, 박순준 전주시 부시장, 수산업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내륙지역의 수산물 안전사고 발생으로 내수면 양식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내수면 수산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 제기되었고, 전북지역은 장거리에 있는 장항지원에서 관리하여 안전성 관리 어려움과 수입수산물 검역, 수출수산물의 검사를 위한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어업인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내륙지역의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해양수산부, 전라북도, 전북도, 전북도의회, 전주지원을 개원한다.

전주지원 개원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강화로 오염 물질 사용 및 유통 차단,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로 어업인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수산식품의 검역 및 수출수산물의 검사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되어 어업인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주지원 이인수 지원장은 "내수면 양식산업이 활발한 전북지역을 전담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직원이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간판을 들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26일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변경된다.

경력 짧은 공무원도 높은 성과급 받는다

불합리한 직무성과평가 제도 개선 구조적 해소방안 마련

전북도는 25일 지난 민선5기부터 10여 년간 운영해오던 BSC(직무성과평가) 제도를 일부 개선해 BSC결과를 근무성과평정과 성과급에 동시에 적용하지 않고 분리하여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은 5급 BSC결과가 승진에 관계된 근무성과평정에 그대로 반영됨으로 인하여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승진 연공서열이 높은 대상이 근무성과평정은 물론, 성과급도 많이 받게 되는 구조로 운영되어 경력 짧은 공무원이 평정기간 동안 높은 성과를 내어도 연공서열에 밀려 높은 성과급을 기대하기 어려웠

던 점의 개선을 위하여 BSC결과를 성과급에만 적용토록 했다.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부터 적용, 2017년 하반기부터는 5급까지 확대 개선 할 예정이다.

이로써,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 승진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묵묵히 열심히 일 해온 경력 짧은 공무원도 앞으로는 높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전라북도 인사발전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 김일재)의 전문가와 행정자치부 인사관설팅, 도청 직원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구조적 해소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전북 2020 도약을 위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한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하고, 승진연한이 부족하더라도 일정기간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은 성과급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번 BSC결과의 균형 분리를 통해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인사제도를 발굴 개선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전북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정부 8개부처 조직개편 완료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범

중소벤처기업부, 해양경찰청이 신설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새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각각 외청으로 독립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행정부와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 개편됐다.

차관급 기구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

(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가 신설돼 각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명칭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

개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7부 5처 16청·2원 5실 6위원회 등 중진 51개에서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등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중진 129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했다.

부처별 주요 하부조직도 개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두어 재난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개혁과 소통', '보권과 자치'라는 국정철학을 구현하고자 창조정부조직실을 '정부혁신조직실'로,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각각 개편했다.

이밖에도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했고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뉴스

도내 기관·기업·한국스카우트연맹, 2023 세계잼버리 후원협약 체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주상공회의소 등 전북도내 기관 및 기업에서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에 힘쓰기로 했다.

전북도는 25일, 송하진 도지사,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정대영 전북건설단체연합회 회장, 한국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2023 세계잼버리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8월 16일 개최될 예정을 앞두고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성공을 위한 전북도내 민간부문의 참여 의지와 그간 대륙원정대 등을 통해 파악한 재개발국의 요구사항

해결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마련됐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국제 청소년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을 목적으로 ▲재개발국 스카우트 운동 등 청소년 진흥활동 ▲청소년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교류활동을 위해 도내 기관 등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서로 협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협약기관을 대표해 정대영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 회장은 "국가적인 이슈며 전라북도가 발벗고 나서서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힘을 보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에서 적극 협력해줘 막바지 유치활동에 큰 힘이 되며, 대단히 감사하다"며 화답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에서 잼버리 유치활동을 펼치고 어제 귀국했다"며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한 도민 모두의 정성과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개발국에 예산지원은 3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 기업과 매칭 후 2017년부터 5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서울 재정자립도 85%·전북은 28.6% 격차 심각하다"

이도영 도의원,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전주2, 국민의당·사진)은 25일 열린 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도영 의원은 "전체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로 교착화되고 있고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68%에 불과한데, 서울의 재정자

립도는 85%인 반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8.6%에 머물러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도영 의원은 또 "사회복지지출은 2009년 26조원에서 2016년 49.5조원으로 연평균 9.0% 증가한 반면, 지방예산은 2009년 137.5조원에서 2016년 184.6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에 그쳤다"며,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이 3.20%라는 점과 그간 지방교부세 부족채원을 고려해 현행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3%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재원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